

서울시교육청, ‘학원법’ 위반 사교육업체 112곳 적발

부당광고 모니터링·특별점검 고발·과태료 등 199건 행정처분 신고포상금제 등 개선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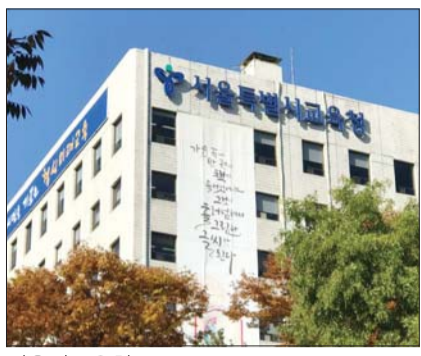
서울시교육청이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부당광고 모니터링과 특별점검을 실시해 총 112개소를 적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광고 감시 전문업체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지난해 4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온라인상 부당광고 등 ‘학원법’ 위반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112곳을 적발하고 199건의 행정처분을 했다

이번 점검은 유아대상학원, 개인과외교습자, 입시·컨설팅 등 진학지도 학원이 학습자 모집을 목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하는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SNS 및 개인과외교습 중개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시교육청은 학원 무등록 교습, 학원 외 명칭 사용, 거짓·과대 광고, 교습비



서울시교육청 /메트로신문 DB

등 중요사항 표시의무 위반과 과도한 선행학습 유발 사항 등을 점검했으며, 개인과외교습의 경우 미신고 개인과외교습, 교습장소 위반, 중요사항 표시의무 위반 등을 점검했다.

조사 결과,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와 부당광고 수는 ▲유아대상학원 125개 원 및 광고 183건 ▲개인과외교습자 광고 211건 ▲진학지도 학원 117개소 및 광고 249건으로 파악됐다.

이 중에는 초등학생에게 고교 교육 과정을 가르친다는 광고하거나 학습자 또는 학습자였던 자의 성명이나 진학 학교 명칭을 기재해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사례가 포함됐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월 15일부터 12월 21일까지 모니터링 결과와 연계한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현장점검이 필요한 유아대상학원 및 진학지도학원 215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112개소를 적발했고, 199건의 행정처분을 실시 또는 실시할 예정이다.

행정처분 내역은 무등록 운영 등 고발 7건, 교습정지 4건, 시정명령(벌점 부과) 등 146건, 과태료 부과 42건 2020만원이다.

이 중 유아대상학원 86개소를 적발, 138건 행정처분 했다. 처분 내역은 고발 2건, 교습정지 3건, 시정명령(벌점 부과) 등 103건, 과태료 부과 30건 1140만원이다.

진학지도학원은 26개소 적발하고 61건을 행정처분했으며, 처분 내역을 보면 고발 5건, 교습정지 1건, 시정명령(벌점 부과) 등 43건, 과태료 부과 12건 880만원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러나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온라인 게시글의 특성상 연락처 등 작성자 정보가 제한

적이어서 위반 의심 사례를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점검으로 이어질 수 없는 한계가 나타났다”며 “연락처가 확인된 32명에 대해서는 개인과외교습 신고 및 학원 관련 법령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모니터링 조사가 실제 지도·감독으로 연계될 수 없는 한계 등을 감안해 불법행위 적발 시 벌점, 과태료 부과 강화 등 교육 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신고포상금제 활성화 등 개인과외교습자 관리에 대한 정책도 발굴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부당광고 모니터링 사업 결과 분석을 통해 ‘2021년 학원 등 부당광고 모니터링 위반유형별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부당 표시·광고 위반 의심 사례 유형 제시, 관련 법령 및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해 학원 업무 담당자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16개) 및 교육지원청(11개)에 배포했다.

/이현진 기자 ihj@metroseoul.co.kr

건국대-강원랜드

디지털 전환 등 상생협력

건국대학교는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디지털 전환사회에 공동 대응하고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강원랜드와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강원랜드 컨벤션타워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전영재 건국대 총장, 김지인 실감미디어혁신공유대학사업단장 등 학교 관계자와 이삼걸 강원랜드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양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위한 R&D 과제 발굴·추진 및 자문 ▲온오프라인 미래사업 공동 발굴 및 자문 ▲디지털 전환과 메타버스 커리큘럼 이용 제휴 ▲디지털 전환 관련 인재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등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이현진 기자

서울과기대-지능정보산업협

AI 기반 교육사업 추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6일 대학본부 3층 총장실에서 지능정보산업협회와 ‘인공지능(AI) 기반 교육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지능정보산업협회는 지능정보산업 육성정책에 의해 설립된 한국의 인공지능 산업을 대표하는 단체다. 2016년 11월 설립돼 국내 인공지능 분야의 활발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산업 활성화 촉진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SK텔레콤이 회장으로 현재 150여개의 회원사가 가입돼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앞으로 ▲인공지능 교육과정 연구 개발 공유 ▲인공지능 관련 기술 개발 및 연구 협력 ▲인공지능 관련 강의, 세미나 및 학생 취업지원 ▲실현장비, 교육시설, 도서관 등 인공지능 관련 시설 공동 활용 등을 활발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현진 기자

세종대

한컴 모빌리티 공모전 대상

세종대학교는 디자인이노베이션 전공 학생팀이 한컴MDS 스마트 모빌리티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실내디자인 분야, 실외디자인 분야, 미래자율주행차를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분야 등으로 나눠 진행됐다.

세종대 디자인이노베이션전공 조준한, 이정우, 서예지, 조유나 학생으로 구성된 ‘선행연구’팀은 미래자율주행차를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분야에 참가해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타는 1인 모빌리티 ‘PETA’를 제시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1인에 맞춰 반려인과 반려동물 모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빌리티를 고안했다.

심사는 현대모비스 김형수 디자인센터장을 비롯한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선행연구’팀은 만장일치로 대상에 선정됐다.

/이현진 기자

“대학 등록금 인하·반환, 1월 등심위서 논의해야”

전대넷 기자회견

대선 후보에 등심위 운영 보강 촉구 대학 재정의 법인 부담 강화 주장도

전국 단위 총학생회가 연합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가 대학에는 등록금 인하를, 대선 후보에게는 민주적 등심위 운영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고등교육예산을 확보하고 대학 재정의 법인 부담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9일 1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은 아직도 대학생의 현안”이라며 “대학은 올해 등록금 인하·반환을 위한 논의를 1월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논의하고, 대선 후보는 등록금 인하와 민주적 등심위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2022년 등록금 인하 및 반환, 1월 등록금심의위원회 논의’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기자회견 참가 학생들은 “코로나19 3년 차인 2022년 비대면 교육의 질, 정부의 방역수칙에 따라 변동돼 혼란스러운 학사일정, 이용이 제한된 학내 시설 그 무엇보다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여전히 학생들로부터 등록금 인하 및 반환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지만, 이를 논의하기 위한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비민주적”이라고 지적했다.

2020년 9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이 통과해 ‘재난 상황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 등록금의 감액 또는 면제’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지난해 등록금을 인하한 대학은 극소수다. 지난해 4년제 일반대학교와 교육대학 195개교 중 186개교(95.4%)가 등록금을 동결했고, 5개교(2.6%)가 인하했다.

이들은 “여전히 등심위 정보가 불투명한 것은 물론이고, 대부분 예산 및

결산 안건이 대학 당국의 ‘통보식 행정’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비대면으로 진행된 수업에 어떤 실험실습비가 지출된 것인지 상세 명세를 요구해도 대학 본부는 묵묵부답”이라고 토로했다.

학생들은 높은 등록금 의존율로 인해, 등록금 수입이 대학 재정의 안정성을 뒤흔들 수 있는 재정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학 재정 부담의 책임은 더는 학생이 아닌 정부와 법인이어야 한다”며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절반 수준의 현 고등교육 예산을 확충하고, 대학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행정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성과 투명성이 전제되었을 때,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확대할 수 있고, 매년 반복되는 교비회계 부정사건을 예방할 수 있다”며 “더불어, 법인은 법정전입금에 대한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현진 기자

창원대 창원지역 5개 대학 총장협의회 발족

지역사회 발전 등 교류협력 확대

창원대학교는 7일 대학본부에서 ‘창원지역 대학 간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총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창원대, 경남대, 마산대, 창신대, 창원문성대 등 창원지역 5개 대학이 모두 참여하는 ‘창원지역 5개 대학 총장협의회’를 발족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출범한 창원지역 5개 총장협의회 발족식은 초대 회장을 맡은 이호영 창원대 총장을 비롯해 최호성 경남대

대외부총장, 이학은 마산대 총장, 이원근 창신대 총장, 김성희 창원문성대 학사부총장 등 창원지역 5개 대학 총장(부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지역대학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에 필요한 다각적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 이뤄졌으며, 소속 대학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대학 간 긴밀한 교류협력 및 협력사업을 확대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5개 대학은 대학 간 실무 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했다.



7일 창원대 대학본부에서 창원대, 경남대, 마산대, 창신대, 창원문성대 등 창원지역 5개 대학이 모두 참여하는 ‘창원지역 5개 대학 총장협의회’ 발족식이 열린 뒤 대학 총장(부총장)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창원대

나아가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 등에 따른 ‘지방 소멸’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역대학은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통한 자구책 마련이 무

엇보다 절실한 만큼, 오는 13일 출범하는 창원특례시의 협력체계 구축 및 지속 가능한 협력 프로젝트를 시행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현진 기자